

양분된 동국대 총동창회 통합된다

3월 4일 원용선·박종윤 회장 양측 합의

양분되었던 동국대 총동창회가 1년 만에 재결합된다. 원용선 회장 측과 박종윤 회장은 3월 4일 회동을 갖고 회장추대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동국대 총동창회의 통합은 박종윤 총동창회 회장이 4일 서울 백상빌딩 총동창회 사무실을 방문해 통합을 제의한 데 이어 원용선 총동창회 회장이 이를 수락하며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박 회장은 먼저 준비한 합의문을 통해 △고문단의 회장후보 추대위 구성 △3개월 내 회장 추대위의 후보자 추천 △차기 회장 선인까지 박종윤 회장의 직무 수행 및 총회 의장 담당 △회장 추대위 활동 시 접부터 모든 소송 취하 △차기 회장에 임명해 집행부 구성 △사무실 및 홍보 통합 등을 제안했다.

박 회장은 “모교가 개교 이래 큰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총동창회가 양분되었던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화합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원용선 회장은 “학교가 잘되고 동창회가 잘되자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욕심이 있겠냐”며 “원만 화합을 이룰 수 있

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용선 회장 측 정환민 사무총장은 “예전부터 사무실 통합을 비롯한 통합은 박종윤 회장 측에 요구해왔던 것”이라며 “신입회장 선출 과정 및 회장 직무수행에 대해 일부 문제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통합에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박종윤 회장 측 최창동 사무총장도 “이번 통합 제의는 합의를 통해 차기 회장이 선출되면 1달 뒤라도 바로 회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통합 합의에 이어 이운영 동국대 살리기비상대책위원장이 총장 선출 파행 관련 학교 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이운영 동국대살리기비상대책위원장은 동국대 총장선출 과정에서 비대위 주요활동을 설명 한 뒤 “그동안 동창회가 들로 갈라져 제대로된 목소리를 내지못해 비대위 활동도 위축될 수 밖에 없었다”며 “동문 통합으로 25만 동문이 한 목소리를 내달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비대위가 옳은 일을 하면 최대한 지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비대위가 총동문화 활동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거리를 뒀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이사장직 인수위 구성

위원장 명신 스님 위촉... 학교에 협조 공문

동국대 신임 이사장 선출 과정의 적법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당선자 일면 스님 측이 인수위원회를 구성했다.

동국대 이사장직 인수위원회는 3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 구성 사실을 알렸다. 이날 자리에서는 인수위원장 명신 스님과 부위원장 김진국 동국대 명예교수를 제외한 인수위원 위촉식이 이뤄졌다. 인수위는 위원장과 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 명신 스님은 인사말에서 “적법 절차를 거쳐 일면 스님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그간 동국대에는 이사장직 인수위원회가 없었지만 여러 난제가 있어 불가피하게 인수위원회를 발족했다”며 “인수위원회가 잘 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

혔다.

하지만 인수위원회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는 난색을 표하고 “발족한 것을 알리는 자리라 확고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신 법무법인 지후의 법률 자문을 이사장 적법 선출의 자료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인수위원회가 동국대 법인에 공문을 보내 협조 요청을 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업무방해죄” 등의 불법 행위임을 적시해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수위원회 측은 “회신 공문은 학교에 확인할 부분이다. 우리는 법인에 협조를 요청할 뿐”이라며 “사무실 퇴거까지 이야기했지만 물리적 충돌은 피하고 싶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중앙종회 NGO모니터단 4기 구성

집행위원장에 김종규 원장

조계종 입법기구인 중앙종회를 모니터링해 온 종회 NGO모니터단 4기가 구성됐다. 집행위원장은 김종규 교단자정센터 원장이 맡았다.

모니터단은 제4기 요원으로 7명을 선별했으며, 선발전 요원들은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제201회 중앙종회 임시회에 참가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모니터단은 “종단의 최고결기구인 중앙종회의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신도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열린 종단, 소통하는 종단으로 나아가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전통사찰 국유림 점유 합법화 길 열리다

국회, 3일 '국유림법' 개정... 신고 후 임대 가능

기존 임대금지 조항 변상금 부과

임대·교환되면 사찰 피해 줄어

전통 사찰 등 종교 시설이 점유해 사용하고 있는 국유림을 계약을 통해 합법적인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종교시설이 일정 자격을 갖추면 점유한 국유림과 토지 교환도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국회는 3월 3일 본회의에서 전통사찰 등이 종교용 시설부지로 점유한 국유림을 대부계약(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국유림법)을 통과시켰다. 그간 국

유림법에는 요존국유림(행정재산)은 일부 공공목적은 제외하고는 대부·매각·교환·양여 등을 금지돼 있었다. 일부 사찰들은 과거 측량기술 부족 등의 사유로 요존국유림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례가 왕왕 있어왔다. 이 때문에 변상금을 납부와 정부로부터 해당 부지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받는 등 사찰 운영에 큰 지장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국유림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거용 시설부지, 종교용 시설부지, 농지 용도로 국유림을 10년 이상 무단점유한 경우 2년 이내 자진신고하고 산림청장이 심사하여 원상복구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에 필요한 산지전용 신고의 수리 및 산지전용허가 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종교용 시설부지의 경우 2000㎡(605평) 이내까지 대부계약이 가능하며, 전통사찰의 경우 특례를 적용해 전통사찰이 점유한 국유림이 2000㎡를 초과하더라도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된 면적 이내까지 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대부계약은 법 시행 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국유림을 대부받아 5년 이상 사용한 경우 해당 국유림을 공유림(공유림 또는 사유림 그 밖의 토지)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해 장기적으로는 토지의 소유권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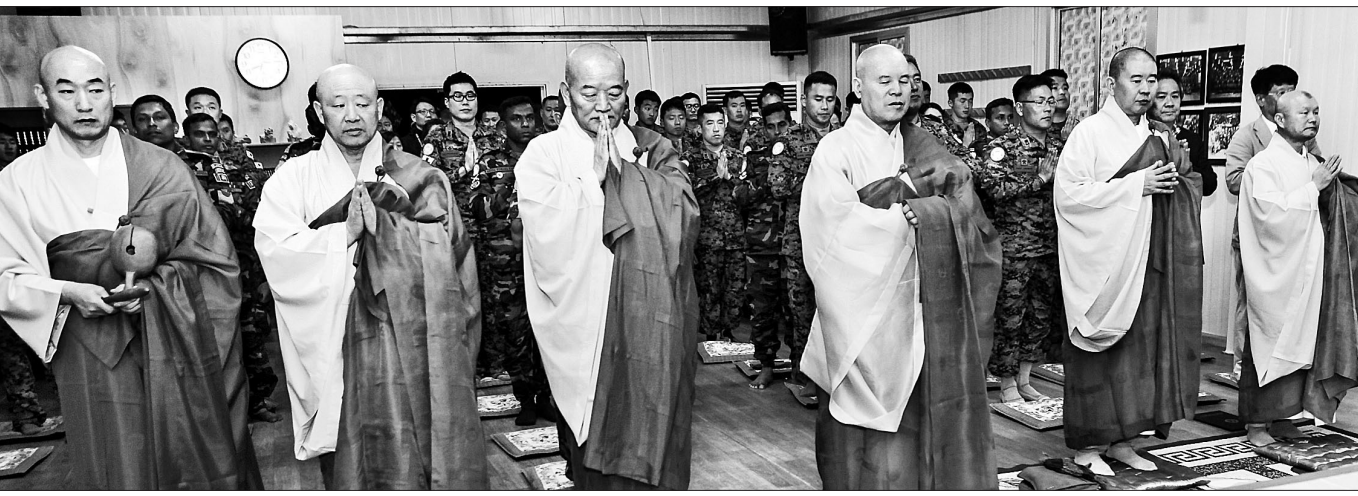
이에 대해 조계종 기획실은 “이번 개정으로 요존국유림에 대한 무단점유지라도 기존에 적합하면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대부계약 후 5년이 경과하면 토지교환

도 가능하여 사찰의 보호 및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많은 사찰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기획실은 재무부 등과 협조하여 국유림 무단점유지 현황을 조사하고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선 사찰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점을 유의하여 자진신고의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면서 “2,000㎡를 초과한 국유림 무단점유지가 있는 전통사찰은 개정된 국유림법의 시행 전까지 해당 점유지를 포함해 전통사찰보존구역 등을 지정하거나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된 국유림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행령 개정 등의 보완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종단 방문단은 3월 1일 레바논 동명부대를 격려 방문하고 세계 평화법회를 개최했다.

한국불교, 레바논 평화를 기원하다

자승 스님 등 조계종 방문단, 1일 동명부대 방문

한국불교계가 전쟁종식과 평화정착을 위해 레바논 동명부대를 찾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종단 방문단은 3월 1일 레바논 동명부대를 격려 방문해 세계평화기원법회를 개최했다. 또한 지역 이슬람 지도자들과 만나 전쟁종식과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자승 스님은 동명부대 군법당(호국 동명사)에서 장병들과 함께 한 법회에서 “레바논은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종교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불자 장병들에게) 이웃을 소중한 인연으로 품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는 유엔평화유지군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斯里랑카 장병들도 함께 세계 평화를 발원했다. 합남규 동명부대장은 “부대에 큰 힘이 되어 감사드린다”며

“더욱 정성을 다해 임무 수행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자승 스님은 부글리아 모스크를 찾아 미드라드 합발 수니파 무프티(이슬람 고위 종교지도자)와 환담을 가졌다. 미드라드 합발 수니파 무프티는 “불교는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스스로를 절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교와 이슬람의 가르침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자승 스님은 부르글리아 지역 현안 문제에 공동묘지 부지 매입을 위해 불교계에서 4000만원 지원을 약속했다. 이후 부르글리아 시청에서 열린 취약 계층을 위한 동명부대 물품 공여식에 참

석, 하산 압둘라 시야 무프티, 미카엘 아브라스 로마가톨릭 대주교, 나빌 하지 마론 가톨릭 대주교 등 종교지도자들과 만나 평화 안착을 위한 종교의 역할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조계종 방문단에는 자승 스님을 비롯해 군종특별교구장 정우 스님, 조계종 사회부장 정문 스님,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 한국 불교문화사업단장 진화 스님, 육군사관학교 군종실장 함현준, 이기홍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김동진 불교포럼 상임대표 등이 동행했다.

레바논은 이슬람, 유대교, 가톨릭 등 18개 종파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다종교 국가로서, 종교간 대화 노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날 방문한 동명 부대는 레바논 티르지역에서 평화를 위한 감시활동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종단차원의 해외파병부대 방문은 2005년 민간지도자 중 최초로 전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이라크 자이툰부대 방문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신성민 기자

3.16 비구니 결의대회 장소 놓고 갈등 고조

열린모임, 법륜사 사용 불허 반발

오는 3월 16일 열린비구니모임(가칭, 이하 열린모임)의 결의대회가 예고된 가운데 법륜사 사용을 놓고 전국비구니회와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열린모임은 3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비구니회의 법륜사 사용 불허 방침에 대해 성토했다.

열린모임은 지난 2월 26일 법륜사 사용에 대한 공문을 전국비구니회에 보냈다. 하지만 전국비구니회는 회신 공문을 통해 “(열린모임이)법륜사 법당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 경우 대내외적으로 비구니회의 명예와 위상은 더욱 추락할 것이 명약관화하다”면서 “법당 설립 및 운영 목적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장소 허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열린모임은 “결의대회 장소 불허 방침을 알려준 것에 대해 많은 비구니 스님들이 실망과 격분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3월 16일 결의대회에서 분명히 일어날 것이며 비구니회가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전국의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비구니 회임을 대중의 힘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성토했다.

열린모임 공동대표 임대 스님은 “결의대회는 예정된 장소에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잘못된 운영위원 선출 시스템과 16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재선출, 종장기 발전 계획 수립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의대회 동참만으로 전국비구니회가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성민 기자

전국비구니회에 바란다

雪後始知松柏操 눈 온 뒤 비로소 송백의 지조를 알 수 있고
事難方知丈夫心 일이 어려워야 장부의 마음을 알 수 있네

불교의 정신이 늘 그래왔듯이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지 않는 것은 중생 교화의 염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생교화에 앞서 출가사문은 먼저 인천의 스승이 되는 위의와 자질을 갖추어야 하고, 반드시 우리 자신부터 바로 세우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요즈음 비구니 승가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대들은 과연 청출여람이로다. 하지만 부처님의 전법교시처럼 처음과 중간과 끝이 모두 좋아야 한다. 반드시 慈悲喜捨의 정신아래 서로 공생하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결의대회가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는 동시에 다시 한번 비구니들이 청정승가의 위상을 회복하고 결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전국비구니회관을 설립하고 전국비구니회를 발족시킨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가는 전통을 만들어야 한다.

단, 결의대회가 아름다운 회향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국비구니회 회장의 지혜로운 결단과 책임이 요청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불기 2559(2015)년 3월 6일